

## 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10월 15일(월) 배포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대외협력팀  
김현주 선임전문원 Tel.02-3299-1263

# 한-WB 공동 KSP 지식공유포럼 KSP를 통한 개발정책 논의의 지평 확대

- 기 간: 2012년 10월 15(월) ~ 16(화)
- 장 소: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주 최: KDI 국제정책대학원 · 기획재정부 · 세계은행

## - 세션 2.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 개발정책 과제 요약 -

### 발표 1. 보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마이클 크리머 (하버드대학교 교수)

- ☐ 보건 분야에서의 정부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인적자본 발달 부문에서의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에 관한 연구는 1995년을 이래로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 무작위추출 실험 연구의 도입에 의해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음.
- ☐ 보건에 관한 무작위추출 실험 연구를 통해 얻은 실증 증거의 개관을 통해, 개발과정에서 보건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교훈과 특히 정부의 효과적 역할에 대해 고찰함.

□ 크리머 교수는 저소득층에서도 양호한 건강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로 최근 베트남의 최근 기대수명은 70세로 미국의 1900년대 평균 수명인 50세보다 20세가 높는데, 이는 미국의 1900년대 일인당 국민소득의 1/5 인 상황에서 달성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음.

○ 이는 전염병 등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역주사와 항생물질이 비싸지 않게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

□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기대수명이 46세인 것을 보면, 아직 많은 나라에서 개선 가능한 건강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백신, 모기장과 같은 이미 이용 가능한 의료 기술과 공공 건강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접근과 실제 활용이 어렵기 때문.

□ 기존의 의료기술과 제품에 대한 접근과 실제 활용 문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저소득층에게 어떤 형태로 얼마나 부담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 설계가 중요한 이슈가 됨.

○ 의료수가가 비싸면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고, 의료수가가 무료이면 의료 서비스와 제품이 오용됨.

□ 케냐의 75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향평가에서 기생충 감염률 감소가 학교 결석률을 25% 줄이고 교육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이끌어 냄을 보여줌. 예방적인 치료는 재정적인 여파에 따라 차이를 보여줌.

□ 보조금 지급의 경우, 의료수가를 조정함으로써 의료 수혜자와 공급자 모두의 인센티브를 변화시킴.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실행한 조건부 현금지원 (Conditional Cash Transfer: CCT) 프로그램은 유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크리머 교수는 보건 분야의 올바른 관행이나 습관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소액의 인센티브도 충분하다고 주장함.

- 비용효율이 높으면서도 간단하고 싼 기술로 보건증진을 할 수 있는 예로 면역예방주사, 모기장, 정수처리, 염소 지급, 구충약 공급 등을 들고 있음.
- 다만, 보건 비용이 높은 급성 치료, 지역사회 동원력, 민간기관(NGO) 외주사업 등의 경우에는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치료가능한 질병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함.

### **발표 1 관련 토론**

정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보건 분야 개발 영향평가 시 공급자의 인센티브 효과를 보기가 어려우며, 수혜국가의 문화, 역사 등의 고려가 중요함. 또한, 개발은 국가건설의 이슈이므로 미시적 접근과 더불어 거시적 접근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함.

시릴 뮐러 (세계은행 국제협력담당 부총재)

- 보건 분야는 낮은 예산과 정부지원으로 단기적,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음.

## 발표 2. 금융위기와 거시경제 및 개발

노부히로 기요타끼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 1. 연구 목적

- 본 발표는 2007년 이후 금융위기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그 경험이 주는 거시경제 정책 및 경제개발에 대한 함의를 논의함.

### 2. 자산거래의 자유화

-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기존의 자본시장 개방에 관한 논의는 자유무역으로부터 오는 이득의 관점에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주장하나, 자본거래의 핵심인 신용(credit)은 같은 시점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거래와는 달리 기간간(intertemporal) 거래이므로, 채무불이행이라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자본계정의 자유화에 대해 단순한 자유무역(free trade)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금융자산/신용거래에는 담보가 요구되고, 자산의 담보 능력은 기술, 정책, 경제제도에 따라 다르며, 신용계약 때문에 총자산보다 가능한 대출규모가 적게 산정됨. 국내대출과 국외대출에 대한 담보 자산간의 차이는 국내경제가 국제 금융시장에 통합된 정도에 따라 다름.
  - 국내 금융시장체제가 低개발상태인 경우, 생산력을 가진 이들은 충분한 투자자금을 얻지 못하며, 반대로 생산력을 가지지 못한 자본가들은 채무불이행을 우려해 자금대출을 주저함. 생산적인 프로젝트로 자금이 이동하지 못함. 따라서 자본계정의 자유화 이전에는 금융과 임금억제로 인해 총요소생산성(TFP)이 낮음.

□ 자본계정의 자유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금융시장 억제와 임금 억제간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있음.

- 임금 억제가 클 경우,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생산적 기업뿐 아니라 비생산적 기업 역시 해외자본을 차입하게 되면서, 단기호황을 누리나 총요소생산성이 저하되므로 지속되지 못함.
- 금융시장 억제가 클 경우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면 대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capital flight)문제에 직면. 임금 및 고용이 감소하나 장기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됨.

### 3. 금융시장 가속도효과(financial accelerator)

□ 발달된 금융제도가 자본거래의 자유화로 이익을 얻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금융위기의 교훈. 미국과 같은 선진금융국도 금융위기를 겪음.

- 선진 금융경제에서도 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채무가 크고 신용제약을 겪는 기업들의 순가치를 감소시키는 충격이 발생했을 시, 자산수요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자산 사용가격의 하락하게 되고,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해당 회사들 자체의 순가치가 자산 사용가격보다 더 큰 비율로 하락하여 결국 실질총생산이 위축되어 금융충격이 실물경기 전반으로 확산.

### 4.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시각: 원죄 (original sin) vs. 예금인출 쇄도 (bank run)

□ 금융가속도효과 모형은 오늘날 미시경제모형과 결합하여 금융위기 설명. 그러나 이외에도 bankrun과 sudden stop을 고려해야 함.

- 원죄설: 위기 이전 지속 불가능한 자본유입으로 인한 비생산적 분야의 확장에 의한 호황기 중 왜곡된 자원배분이 원인.
- 예금인출 쇄도설: 차입자들의 자산의 유동성이 부채의 유동성보다 낮은 경우, 은행들은 만기보다 앞서서 순가치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산을 유동화하려고 하고, 이로 인한 체계적인 자금유출의 위험이 원인.

## 5. 정책함의

- 정책결정자들은 절충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3가지 초기의 비효율성의 경고신호인 (1) 자산가격의 급상승, (2) 채무 규모의 총산출량(GDP)보다 빠른 증가, (3) 상당한 정도의 자본유입을 감지하면, 예방적인 정책 조치(DTI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금리 인하와 팽창적 통화 정책과 같은 전통적 정책 이외에도, 유동적이고 고위험 금융자산을 구매하는 비전통적 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손실을 완화할 수 있음.
-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은 금융과 비금융 부문의 대차대조표와 노동과 자본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경제성장의 추세에 달려있음.
  - 일본은 1991년이전까지 성장률이 높았지만, 이후 일본 은행이 자금구조의 현재 및 미래 모두 신용경색 상황에 처해있다면 자금흐름의 제약을 만회하기 위해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이 모두 감소하고, 위기 종결 이후에도 단기 운전자금과 임시노동 고용의 회복은 빠르지만, 종신고용과 고정자본의 투자 및 실물자산의 회복은 느림.

- 금융자산의 위기는 실물자산에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침. 금융위기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유동화가 어려운 무형자본에 대한 투자 및 장기성장 감소. 예로 일본은 청년층 정규직 고용에 대한 투자의 저하 경향이 관찰되는데 이는 장기적 성장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어느 나라에서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금융과 저성장의 덩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제.

## 발표 2 관련 토론

시릴 밀러 (세계은행 국제협력담당 부총재)

- 개도국은 자연재해, 식량, 생필품의 가격 충격 및 금융제도 부문에서 취약함.
- 재정정책의 영역에 있어 자동안정화장치는 선진국뿐만아니라 개도국에서도 가능함. 다만 필수적 조건은 일시적으로 강력한 완충장치를 설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여부임. 선진국도 개도국도 공공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키요타키 교수의 시사점. 정부의 금융위기극복은 재정수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음.

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자유화에 대해 워싱턴 컨센서스는 금융과 재화시장의 성격을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있어 한계가 있음.
- 중국 한국 등의 경우, 정부의 개입은 산업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는 민관간의 정보공유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장거래에서 정보교환 활동 등 제도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나 정경유착 등 부작용도 따랐음.